

# 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기간 : 2023.03.10(금) ~ 2023.03.16(목)

제공일시 2023 03 24 Fri

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

문의 02 398 7675

# 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기간 : 2023.03.10(금) ~ 2023.03.16(목)

제공일시 2023 03 2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

##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

### 1. “EU, 중국 청정기술 수입 규제”...친환경 산업 분야 중국 견제

- 유럽연합(EU)이 역대 친환경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, 중국 청정기술의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
- 파이낸셜타임스(FT)에 따르면, EU 집행위원회는 16일 탄소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 초안을 공개할 예정임 보도에 따르면,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는 EU 시장 점유율이 65% 이상인 국가의 제품은 배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
- EU는 소비자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에도 이와 유사한 조건을 부과할 것으로 전해졌음
-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유럽의회 연설에서 탄소중립산업법과 관련해, 2030년까지 필요한 청정기술의 최소 40%를 역내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음

(경향신문, 2023.03.16) 정원식 기자  
(파이낸셜뉴스, 2023.03.16) 박종원 기자  
(ESGToday, 2023.3.16) Mark Segal 기자

### 2. “유로7은 비현실적 환경 규제” 유럽 8국 개정 나섰다

- 독일·체코·이탈리아·폴란드·포르투갈·루마니아·헝가리·슬로바키아 등 유럽 8국 교통부 장관들이 13일 EU가 추진하는 자동차 배출 규제 ‘유로 7’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모여 회의를 가졌음
- EU의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정책에 대해 독일,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 위기에 놓인 데 이어,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‘유로7’까지 반발에 직면하면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둘러싼 유럽 내분이 심해지고 있음
- 유로7에 따르면, 승용차는 2025년 7월부터, 대형 상용차는 2027년 7월부터 적용되고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는 신차의 각종 오염 물질(일산화탄소·탄화수소·질소산화물·미세 입자 물질) 배출량을 대폭 줄여야 함
- 이에 대해 배터리와 핵심광물의 중국 의존도, 일자리 대폭 감소 등 반발에 직면해 규제 시기가 늦춰지거나 완화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음

(조선일보, 2023.03.15) 김아사 기자

### 3. EU 27개국, 2030년까지 에너지 총소비 11.7% 의무감축한다

- 유럽연합(EU) 27개국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러시아산 화석연료에서 탈피하기 위해, 오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를 11.7%씩 의무적으로 감축하기로 했음
-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10일(현지시간),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‘에너지 효율 지침’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음
- 합의에 따라 회원국들은 내년부터 에너지 사용량을 매년 최소 약 1.49%씩 감축하고, 2030년까지 연간 감축 비율을 1.9%까지 늘려야 하고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 군사 분야를 제외하고, 처음부터 연간 1.9%씩 감축하도록 더 강화된 지침이 적용됨
- 새 에너지 효율 지침은 2021년 7월, EU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55%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포괄적 추진 방안을 담은 ‘핏 포 55’(Fit for 55) 패키지의 일부임

(연합뉴스, 2023.03.10) 정빛나 기자

## 1. MS, 첫 해양기반 탄소제거 계약 체결

- 마이크로소프트는 해양의 이산화탄소를 자연적으로 제거하고 이것을 심해에 영구적으로 가라앉히는 해양 기반 탄소제거 기술회사인 러닝타이드(Running Tide)와 함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음
- 러닝 타이드는 MS를 대신해 1만2000톤 가량의 탄소를 제거함 2017년 출범한 러닝 타이드는 광합성, 해양알칼리성 강화 등 자연 프로세스를 이용해 빠른 탄소 고정(흡수)와, 저에너지 질량 전달 기술을 활용해 탄소를 심해에 가라앉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
- MS는 최근에도 DAC 스타트업인 클라임웍스(Climeworks)와 탄소 제거에 합의한 바 있는데, 이 계약에는 이산화탄소 제거의 효과적 측정, 보고, 검증(MRV)을 실현하기 위한 혁신 기술도 포함돼있음
- 해양기반 CDR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제3자 인증이 없기 때문에 MS는 러닝타이드를 통해 MRV 표준과 품질 보증을 하는 형태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임

(ESGToday, 2023.3.13) Mark Segal 기자

## 2. 에코바디스, 공급망의 배출 핫스팟을 식별하는 툴 출시

- 에코바디스는 공급망 내의 탄소 배출 핫스팟이 어디인지 식별하고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배출리스크 매핑 도구인 '탄소 히트맵'을 출시했다고 발표했다
- 이 새로운 솔루션은 1만4000개가 넘는 보고기관,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GHG 배출 데이터 저장소와 각 조직의 특정 중요 데이터를 결합했음
- 이를 통해 기업의 가치사슬 전체에 걸친 탄소배출 리스크 계산을 제공하고 '핫스팟'을 특정하며, 배출량 감소 전략을 알려줌

(ESGToday, 2023.3.14) Mark Segal 기자

## 3. 펩시코, 공급망 인권 실사 문제 터지자 거래 중단하기로 결정

- 인도네시아 팜유 생산업체인 아스트라 아그로 레스타리(AAL)가 생산 과정에서 토지 강탈, 환경 파괴, 인권침해 등 각종 사회적·환경적 문제를 일으켰다고 알려졌다
- 13일(현지시간) 로이터 통신이 보도에 따르면, 미국 식품업체 펩시코와 네덜란드 유제품 제조업체인 프리슬란트 캄피나는 AAL로부터 팜유 구매를 중단하기로 공식 결정했다고 밝힘
- AAL이 펩시코와 캄피나와 직접적인 거래를 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면서 공급망 내 인권 실사 이슈는 공급자와 기업들에게 리스크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
- 허쉬, 네슬레, P&G 등 6개 주요 소비재 회사들은 작년부터 AAL과의 거래 관계를 끊겠다고 이미 선언한 바 있음

(임팩트온, 2023.3.17) 김환이 기자

## 1. 반도체 이어 수소·전기차도 ‘15% 세액공제’ 받는다

- 여야가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8%에서 15%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에 합의했으며, 관련 혜택은 1월 이후 올해 투자액 전체에 소급 적용됨
- 국회는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 관련 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6%에서 8%로 상향했고, 이번에 다시 15%로 올렸는데, 투자 증가분에 적용되는 10%의 임시투자세액공제까지 합하면, 최대 25%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
- 세제 혜택 적용 대상도 넓혀서 정부안에서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있는 ▲반도체 ▲디스플레이 ▲2차 전지 ▲백신 등에 수소와 미래 자동차를 추가하기로 했음
- 법 개정안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,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

(한국경제, 2023.3.16) 노경목, 고재연, 전범진 기자

## 2. 세계 최초 수소발전 입찰시장 열린다

-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입찰 시장을 개설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수소 발전에 착수함
-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3일까지 수소발전 입찰 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으며, 확정되면 올해 상반기 안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수소발전 입찰을 진행할 계획임
- 그간 수소발전은 ‘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’(RPS)를 기반으로 연료전지 등을 통해 보급됐으나, 태양광, 풍력과 달리 연료비가 소요돼 다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음
- 올해 상·하반기에 각 1회씩 2025년 일반수소 발전분에 대한 입찰을 진행함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일반수소 발전 개설 물량은 매년 1.3테라와트시(TWh)로 정해질 예정임

(이데일리, 2023.3.12) 윤종성 기자

## 3. ‘무늬만 친환경’ 처벌 법제화 조짐에…기업들 긴장

-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한 ‘그린워싱(위장환경주의)’을 규제하자는 논의가 닳을 올렸음
- 현행법에는 제품의 거짓 친환경 광고에 대한 처벌 근거만 있는데, 앞으로는 경영 활동에 대해서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생길 것으로 전망됨
- 이달 중순 그린워싱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는데, 이를 위해 환경부는 산업계 관계자와 기후솔루션·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, 환경 전문가 등 15명 안팎의 전담 작업반을 구성함
- 환경부가 연구원의 제언을 받아들여 그린워싱 규제를 법제화하면, 향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기업 경영 활동도 법에 근거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, 환경부가 경영 활동의 친환경 여부까지 따져보겠다고 예고하자, 업계에서는 우려가 쏟아져 나왔음

(매일경제, 2023.03.10) 이희준, 송민근 기자

## 1. CJ대한통운, 업계 최초 '액화수소 운송사업' 첫 발 떤다

- CJ대한통운이 액화수소 운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음
- CJ대한통운은 오는 27일, 제11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내 목적사업에 '69. 고압가스 저장 및 운반업', '70. 기체 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' 등 4개 항목을 변경·추가할 방침을 공개함
- CJ대한통운이 액화수소 운송 실증 착수에 앞서 관련 내용을 사업목적에 추가하고,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됨
- CJ대한통운은 SK E&S와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데, 올 하반기부터 SK E&S가 생산하는 액화수소의 탱크로리 운송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임

(뉴데일리, 2023.03.13) 김보배 기자

## 2. SK에코엔지니어링, 온실가스 감축 종합 솔루션 제공

- SK에코엔지니어링이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'분산형 열병합 발전 마케팅 플랫폼'을 공식 런칭함
- SK에코엔지니어링은 자사가 보유한 분산형 열병합 발전 솔루션 패키지과 기술 정보, 컨설팅 서비스를 통합 콘텐츠화한 마케팅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음
- '분산형 열병합 발전 솔루션'은 SK에코엔지니어링이 핀란드 발전 주기기 업체인 바르질라(Wartsila)사와 협력해 만든 사업모델로, 사업장 내 온실가스 배출량과 전력 소모량 현황 등을 진단하고, 발전소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화를 실현할 수 있는 솔루션임
- 이 플랫폼에는 '사업 타당성 분석 시뮬레이션' 기능이 탑재돼 있어 솔루션 도입 시 예상되는 기대 편익 등을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통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

(머니투데이, 2023.03.16) 배규민 기자

## 3. 대우건설, 보도블록에 CO2 저장하는 'DECO2' 기술 개발

- 대우건설이 이산화탄소를 포집·재이용(CCU, carbon capture & utilization)하는 기술인 DECO2를 개발했음
- CCU 방안은 CCS와 달리 대규모 저장소가 필요하지 않으며,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후 이를 이용해 새로운 부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음
- CCU는 이산화탄소를 반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으며, 무엇보다 시멘트를 대체하는 제반 소재로 활용할 수 있음
- 현재 DECO2 기술은 해외 EPC(설계·조달·시공) 사업 수주 참여 시 홍보에 활용되고 있다. 또한 중소 기업에게 로열티를 받고 기술 이전을 진행하고 있음

(한스경제, 2023.03.13) 문용균 기자

# Weekend ESG Insight

이슈 검색기간 : 2023.03.10(금) ~ 2023.03.16(목)

제공일시 2023 03 2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

## 격동하는 미국의 탄소 관련 정책 법안

- 미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연방정부 예산에서 석유와 가스 산업 보조금 수십억 달러를 폐기하는 예산을 제안했음. 이 제안은 야당인 공화당이 미 하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,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소비자의 에너지 비용이 높은 시기에 화석연료 산업계가 기록적인 이익을 거둬들이는 것에 대해 반복적으로 비판해온 백악관의 경고로 볼 수 있음
- 미 화석 연료 산업에 대한 보조금 규모를 계산하는 것은 보조금이 미국 세법에 걸쳐 있기 때문에 복잡하지만, 연간 100~500억달러(약 13~66조원) 사이로 추정됨. 미 연방정부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보조금을 삭감하면 정부는 10년 동안 거의 310억 달러(약 41조원)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- 예산안에서 에너지부 예산의 첫 페이지를 보면, 2023년 통합 세출법(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, 2023)에서 제정된 전략적 석유 준비금 잔고의 21억달러(약 2조7837억원) 삭감이 포함한다고 되어 있음. 내년 예산은 2023년 수준보다 13.6% 이상 늘어난 520억달러(약 68조원) 가량임
- 미국의 석유와 가스 보조금에는 미국 내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, 해외 생산 및 소득에 관련된 탕감과 공제 등이 포함됨. 의회의 초당적인 패널인 조세공동위원회(The Joint Committee on Taxation)는 이 공제를 없애면 10년 동안 130억달러(약 17조원)의 국고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음
- 또, 조세공동위원회는 생산자들이 감소하는 석유 가스와 석탄 매장량의 개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고갈세 감면을 폐지하면 10년 동안 약 129억 달러(약 17조원)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음
- 백악관과 미 에너지부는 이번 삭감을 통해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12억달러(약 1조5906억원)를 요구하고 있음. 미 에너지부는 이 자금은 산업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제안했음. 반면, 미 석유업계는 "지속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"고 반박했음
- 오바마 전 대통령 또한 재임 당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화석연료에 대한 세금 감면을 포기하려 했음. 당시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, 보조금을 없앨 수 없었음. 바이든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공공 토지에 대한 새로운 시추를 끝내고,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해서 화석연료 보조금을 없애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
- 한편, 미국에서도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음. 기후변화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공화당에서도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부터임
- 미국의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다음주 탄소국경조정세 법안을 제출할 가능성을 시사했음. 구체적인 언급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, 이는 존 케리 기후특사가 지난주 목요일(9일) 국회의사당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"(탄소국경조정세를) 검토하고 있다"고 말한 다음 언급됐음
- 린지 상원의원은 한 달 전 CNBC에서 진행한 회담에서 "세계는 기후 보상보다 환경 피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"며 "원원하는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자"고 강조했다. 이는 탄소국경조정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볼 수 있음. 이에 대해 백악관은 공화당의 노력에 대해 "공화당이 민주당원들과 협력하고 초당적인 무언가를 생각해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협상 포인트가 된다"는 논평을 내놨음
- 2021년 3월 EU가 탄소국경조정세 방침을 제시했을 때, 바이든 행정부도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을 언급한 바 있음. 당시 미국 무역대표부(USTR)은 "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중국 위구르족의 강제 노동에 맞서기 위해 탄소 국경조정세 도입을 고려하겠다"고 했다. 그러나 논의는 지지부진했음

(인팩트는, 2023.03.11) 홍명표 기자

(인팩트는, 2023.03.14) 박지영 기자

- 탄소국경조정세에 대해 양당의 입장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. 공화당은 ‘미국 제일주의’ 입장에서 이를 지지하고, 민주당은 ‘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센티브’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임. 그러나 미국의 석유와 가스 기업이 타 국가보다 더 깨끗하게 운영한다는 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소수 상원 의원들은 이미 탄소국경조정세를 주장한 적도 있음
- 이 법안의 주요 지지자들로는 석유가 풍부한 루이지애나주의 공화당 빌 캐시디, 석유가 풍부한 노스 다코타의 공화당 케빈 크레이머, 조 바이든 대통령의 우군인 델라웨어주의 민주당 크리스 쿤스가 있음. 로드아일랜드 주 상원의 셸던 화이트하우스 예산위원장은 지난해 화석연료, 석유화학, 비료, 철, 철강, 알루미늄 등에 톤당 55달러의 탄소 관세를 매기는 법안을 도입하기도 했음
- 탄소국경조정세를 비판하는 측은 “탄소국경조정세를 도입하면 생산 시설은 배출량이 많은 국가로 이동하게 되고, 궁극적으로 지구에는 거의, 또는 이득이 없다”고 주장하고 있음